

5·18진상조사위가 자리싸움 하는 곳이나

14일부터 활동 시작...민주·한국당, 위원 추천 미적 여야 추천 인사들 적합한지 임명 전 철저 검증해야

국방부가 11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진상조사위 활동이 시작돼야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의 무관심으로 위원 구성이 미뤄지면서 정상적인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시대적 요구인 '5·18 진상규명'을 놓고 일부 인사들은 장·차관급인 상임이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권 로비를 불사하는 등 물 밑 다툼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사위 정상 출범 불투명**= 여야 교섭단체 가운데 조사위원을 추천한 정당은 바른미래당이 유일하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은 민병노 전남대 법대 교수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민주평화당은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되면서 추천권을 잃었지만 기존에 추천했던 민 교수를 받아줄 것을 민주당 측에 요청, 양보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11일 현재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조사위원 2명과 상임위원 후보들을 압축한 상황이며 12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적합한 인사를 찾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임위원 1명을 추천 확정했다. 하지만 여야 정당들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 된 이후에 밝힌다는 방침이다.

◇**'젓밥에만 눈독' 비판**= 이런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장·차관급인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물 밑 경쟁을 벌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 추천 몫인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는 A씨가 당내 고위 인사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당내 최고위 인사는 "A씨가 상임위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내 TF 위원에게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위원 자리를 놓고도 과거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당내 인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놓고도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B씨가 유력하다고 알려졌지만 중랑감과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이 장관급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이 5·18 진상규명에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의

임명 전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딴지' 거나**= 한국당은 조사위원 2명,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한다. 일단 한국당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오는 14일까지 조사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제때하지 않아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미룬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어떠한 인사를 추천하느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세월호 특조위에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성과 상식에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주민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제출 요건도 30% 낮춰 주민직접참여제 확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내용에 중점을 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치분권은 재정분권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으로, 이번엔 마련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주민직접참여제는 1999년 주민발안과 주민감사, 2004년 주민투표, 2007년 주민소환 등 제도별로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실제 운영은 저조한 상태. 종합계획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제출 요건도 현재보다 30%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요건과 개표요건 등도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지

방자치법 개정도 추진한다. 종합계획에는 이와 함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로드맵에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부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이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종합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전남 성명에서 "종합계획(안) 입안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단체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도 잡지 못했다. 특히,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시 특정 지역의 세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재정 균형장치를 마련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재정이 취약한 호남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교향사랑 기부제 등도 경제적 기반이 약한 호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한·미·북 정상 엄청난 기회 활용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비건 美 대북정책 대표



조명균(맨 왼쪽)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인사한 뒤 공개개 전향에 따라 취재진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지금의 엄청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해야 하지만 엄청난 기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한국 측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매우 무게감 여기고 있다”며 “한국 측과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훈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도전과 기회를 모두 마주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앞으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황을 진전시킬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 순차 개최 가능성

평양 남북정상회담 D-6 북미대립 해소 기대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남북에 이은 한미, 북미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어 보인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 중인 사실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 샌더스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입장을 잡자고 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지속해온 교착국면이 반전의 출로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인 핵신고-종전선언 대립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다. 적어도 북미 정상이 ‘난제’를 테이블에 두고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기도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남북관계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만 먼저 앞질러 가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일각에선 올해 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재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중재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 무게가 얹어지지 않게 됐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중재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로 보인다. 남북관계만 먼저 앞질러 가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일각에선 올해 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시작으로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재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중재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 무게가 얹어지지 않게 됐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중재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쌀 직불금 재배 면적 따라 차등화 추진

농림부, 개편안 발표...환경 의무 추가 등

쌀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개편 방안을 고심 중인 정부가 농가에 환경 관련 의무를 추가하고 재배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취재진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금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쌀 직불제란 생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매 가격과 쌀 목표가격과의 차이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산지 쌀값이나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 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주는 변동직불

금으로 이뤄진다. 쌀 직불제는 그동안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 목표가격 인상 이후 쌀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수확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았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쌀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직불금 개편을 추진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야 투자자모

* 지분불건/문중산 환영 *
바로합니다. 010-6834-7400

**공통투자가능/월15%이상 수익
근저당/소유권이전으로 법적보장!
오천원매 대부.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공정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가소유 공적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첫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13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9월 13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접수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

목포대학교 남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7시~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암 금정면 저수지부근 땅 1816㎡ 김나무농장·사찰 적합 8900만원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 주택 100㎡ 요양생활적합 35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1868㎡ 찻집등적합 1억3천

주택·원룸·아파트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2억7500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동수동 자연녹지 12076㎡ 교통 좋은 14억7300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전북 신대인 상업지 1213㎡ 감정 6억7천 은행 3억6천 교환가능 (작은병원·빌라·아파트 등 적합) 매 4억6천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601㎡ 은행1억 투자에향호 2500만원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층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억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상가건물

- 북동 토지 538㎡ 건물 1933㎡ 은행 9억2천 매도 1억 6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순천만 대대동 팬션 땅 332㎡ 객실8, 관리실, 은행3억 영영적합 3억천
- 목포시 북항 푸드타운 1층 91㎡ 은행 9천 매도·교환 3억4천
- 동구 수기동 소방도 코너 4층건물 380㎡ 건물990㎡ 은행6억 매도 12억8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합 건물과 교환가 16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중증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